민주 '丁李朴' 삼두체제 재편되나

정세균 - 이강래 '투톱'에 박지원 정책위장 가세

당내 주류 - 비주류 세력판도 변화 가능성 주목

박지원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중용되면서 민주당 내부 역학구도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당장, 당내에서는 박 정책위의장 카드에 따라 정세균-이강래 투톱 체제는 물론 당내 주류-비주류 간의 세력 판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박 정책위의장이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상징성은 물론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화관광부 장관, 대북 특사 등 요직을 섭렵한 데서 나오는 정치적 중량감 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정책위의장을 지렛대 삼아 여야의 대치정국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박 정책위의장은 1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야당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대안을 내겠다"며 "원칙을 지키되 감동적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정세균-이강래 투 톱 체제는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가세한 '삼두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박지원 정책위의장 카드 자체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강행 처리를 막지 못한 이강래 원내대표에 대한 경고성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 일각에서는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강경 노선에 방점을 두고 있는 원내의 대여 투쟁 전략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박 의장이 그동안 보여준 실용적인 정치 행보를 감안할 때 타협과 투쟁을 병행하는 다양한 대여 전략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박지원 정책위의장 카드는 정세균 대표에게도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대권 도전 등 큰 그림을 구상하고 있는 정 대표에게 박지원 정책위의장 카드는 DJ의 복심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지만 정치적 경륜과 장악력, 대중 인지도 등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의장이 그동안 주류의 당내 운영에 말을 아끼고 있는 중도 진영과 비주류 측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내 주류-비주류 간의 세력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지원 정책위의장 카드는 민주당 내부의 역학구도는 물론 여야 대치정국 등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박지원 의원도 정책위의장 카드를 수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전격 기용되면서 당 역학구도에 변화가 올지에 관심이다. 왼쪽부터 정세균 대표, 이강래 원내대표, 박지원 정책위 의장. /연합뉴스

여야 지도부 '강원행' 왜?

한나라 '현장탐방' … 민주 '미디어악법 홍보'

여야 지도부가 11일 강원도를 방문해 각각 민심 잡기 행보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현장 탐방'의 일환으로, 민주당은 '미디어법 원천무효 홍보전'과 지역 현안 챙기기를 위해 강원도 행을 택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곧바로 춘천 강원도청을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어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동계올림픽 유치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강원 방문에서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과 강원도 관광 명품화 등 지역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미디어법 무효 장외투쟁 이후 처음으로 강원도를 방문한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현장 탐방을 '가짜 서민 행보'라고 규정하고 거리 홍보전과 민생현장을 방문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원주 중앙시장 앞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거리 홍보 캠페인을 벌인 뒤 원주 가톨릭센터에서 석면 피해를 입은 시멘트공장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희태 대표 "재선거 출마"

경남 양산에 … 민주 '당청 회동' 맹비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남 양산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례 당청회동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뜻을 전했으며 이 대통령은 "잘 알았다. 당에서 알아서 해 달라"고 말했다고 김효재 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또 이날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내각 및 청와대 개편 문제와 관련, 박 대표로부터 당 안팎의 광범위한 의견을 들은 뒤 "개각과 관련한 시기와 방식은 맡겨 달라"고 말했다고 김 실장이 덧붙였다.

대표직 유지 여부에 대해 김 실장은 "당 지도부와 상의할 일이고 멀지 않아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 대표의 국회의원 출마도 대통령께 보고하고 하나. 대통령의 격려가 없으면 출마도 못하나"라고 비판한 뒤 "그럴 바에야 한나라당을 해체하고 청와대의 한 부처로 편입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MB정부' 주요 기관 고위공직자 출신지별 비교해 보니

총리·장차관 등 160개 요직

영남 〉 충청 〉 호남

(43.8%) (14.3%) (13.1%)

청와대와 정부 요직을 영남 출신들이 독식하고 있으며 이 경향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이명박 정부 요직의 출신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고위직, 행장 각부의 장·차관과 청장 및 주요 실·국장 등 160개 요직 임명자 중 영남 출신이 43.8%인 70명이나 된 반면, 충청 출신은 14.3%(23명), 호남 출신은 13.1%(21명)에 불과했다.

영남 출신 70명 중에서는 TK(대구·경북)가 38명(23.8%)으로, PK(부산·경남·울산) 32명(20%)보다 많았으며 호남 출신 인사는 광주·전남 12명, 전북 9명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모두 19명 중에서 영남 9명(47.4%), 호남 2명(10.5%), 서울 7명(36.8%) 등이었다. 또 장관급 인사 36명의 출신지를 분석하면 영남 13명(36.1%), 호남 6명(16.7%), 충청 6명(16.7%)이었고 차관급 인사 91명은 영남 36명(39.6%), 호남 16명(17.6%), 충청 17명((18.7%) 등으로 영남 편중 현상이 심각했다.

특히 4대 사정권력기관 요직 30명(검찰 11명, 국세청 5명, 국정원 5명, 경찰 9명) 중에는 단 1명(경찰청 차장)만이 호남 출신인 반면 영남 출신은 검찰 4명, 경찰 7명, 국세청 3명, 국정원 2명 등 16명이나 됐다.

또 인사를 다루는 청와대 인사라인과 행정안전부,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주요 자리에는 호남 출신 인사가 단 한 명도 없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구조적으로 인사와 예산 소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호남 인사에 배분된 직책의 경우도 청와대는 사회정책수석과 교육문화수석, 장관의 경우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에는 힘이 약한 자리가 대부분이다.

또 호남인사들이 맡고 있는 법무부 차관, 여성부차관, 국토해양부 차관, 경찰청 차장 역시 인사권 등 핵심 권한이 전혀 없는 무늬만 2인자인 직책이어서 요직으로 구분하기조차 힘든 자리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영남 독식, 호남 소외 기조는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2월 한 언론사에서 정부 요직 100개를 선별, 출신지를 분석했을 때는 영남 출신이 38.5%였고 호남 출신은 15.0%였다. 6개월여 만에 영남 출신인사 비중은 5.3%포인트 늘었고 호남 출신인사 비중은 1.9%포인트 준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 같은 경향이 계속된다면 이명박 정부 요직에서 호남인사들은 완전히 씨가 마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60개 요직에 포함된 광주·전남 인사는 환경부장관(이만의) 농식품부장관(장태평) 감사원장(김황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강윤구) 공군참모총장(이계훈) 법무차관(황희철) 국토해양부 2차관(최장현) 해양경찰청장(이길범) 소방방재청장(최성룡) 경찰청 차장(최병민)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천룡) 금융위원회 서비스국장(김광수) 등이다.

한편,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허위와 왜곡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망국병을 이 나라에서 영원히 퇴치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망국병에 대해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명박 정부 요직 출신지역 비교

영남에서도 TK가 24%나 차지

광주·전남북 인사는 21명 불과

4대 사정기관 요직 호남 1명뿐